

당정 지지도, 나란히 하락세... “尹-韓 갈등에 지지 철회”

尹, 국정운영 긍정 평가 29.6%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낮아
與 ‘고전’... 野와 오차범위 밖 격차
의료대란 해법보다 갈등양상에 우려
與 “정치가 정책 뒤편에 있어”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에서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가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까지 하락세를 보이면서 당정이 여론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에게 조사한 국정 운영 지지도 조사 결과(응답률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기사에 인용한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긍정 평가는 29.6%로 같은 조사로 보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정 운영 지지도 부정평가는 66.7%로 주로 부산·울산·경남(3.2%포인트 ↑), 대구·경북(2.2%포인트 ↑), 30대(5.0%포인트 ↑), 50대(4.3%포인트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경북 구미시 산동읍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부품 전문기업인 원익큐엔씨를 방문해 인사말하고 있다. /뉴스시스

중도층(4.5%포인트 ↑)에서 지난주 조사보다 높게 나왔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과 30일에 전국 1008명을 대상으로 조

사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응답률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민주당 42.2%, 국민의힘 32.8%로 같은 조사에서 1주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양당 간 차이는 9.4%포인트다.

국정 운영 지지도 조사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이 열렸음에도 지지도가 30% 밑으로 내렸다는 것은 정부 입장으로는 뼈아픈 대목이다. 국민의힘도 지난 주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11년 만에 만나 여야 대표 회담을 했음에도 민주당과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은 부정적인 신호다.

더군다나 추석을 앞두고 의료대란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보다 오히려 당정갈등이 나타난 상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추락한 국정 운영 지지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국정운영 난

맥상이 정치, 경제, 생활, 환경 모든 문제를 덮고 있다”며 “쉽게 말하면 정치가 정책을 덮고 있기 때문에 백악이 무효”라고 평했다.

의료대란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 관련해서도 김 전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추석을 앞두고 의정갈등에서 비롯된 의료대란으로서 환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상당히 걱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의료체계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 분노하는 것”이라며 정부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문제의 핵심은 ‘윤한 갈등’에 있다는 분석도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한 갈등의 분열적 양상에 실망한 지지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철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민주당이 퍼트리고 있는 계엄령 준비 논란 등의 ‘괴담설’ 때문에 반사이득을 볼 수는 있으나,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분열을 하게 되니 한계가 있는 듯 하다”고 부연했다.

/빅테홀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박찬대 “尹, 헌법 부정하는 자 공직 임명... 결자해지해야”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독립기념관장·노동부장관 해임 촉구
韓 위기 극복 위한 국회 역할 등 강조



며 발언에 나섰다. 이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김문수 노동부장관·신원식 안보실장 임명 등을 언급하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발뺌하고 있다. 이게 정상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군 정선 교재의 독도 분쟁지역 표기 ▲독도 방어훈련 비공개 전환 ▲동해 대신 일본해 표기 방지 ▲독도 조형물 철거 등을 나열하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도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제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4~5일 이틀 간 정기국회를 맞아 교섭단체 연설을 진행한다. 5일에는 제2교섭단체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설할 예정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비판하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김형석 관장과 김문수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4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국민 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헌정질서 등의 위기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한 제22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약체’,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안했다.

또 그는 “실종된 공정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며 ‘채상병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검찰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제3차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며 “이제 한동훈(국민의힘)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언급했다. 앞서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전날(3일)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차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겐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도 ‘용산의 마음’도

아닌 ‘국민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데 나서달라”며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길이자 보수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원내대표는 “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소중한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대리인이며,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그 기준은 헌법이다.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다”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에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진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도현 기자 yunbgb0611@

정진석 “尹에 개원식 가지 마시라 말씀드려”

(대통령비서실장)

“극단적 여소야대... 난관 돌파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직원 조화를 갖고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나”라며 “나는 대통령께 개원식을 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 체제 후 직원조화는 처음이다.

정진석 실장은 “국회의장단이나 야당 지도부가 이런 상황을 방지하면서 아무런 사전 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통령 보고 국회 와서 망신 좀 당하라고 하고 있다”며 “국회에 가시면 ‘이제 그만

두셔야죠’라고 야당이 면전에 대고 시위를 하고, 어떤 의원은 ‘살인자’라고 퍼붓는데 이런 곳에 대통령이 왜 가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 가시라는 말씀드릴 자신이 없다”며 “대통령께도 개원식에 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실장은 “지금은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이고 난관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은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것이 숙명이자 당위”라며 “탄핵, 특검, 청문회 남발 등 헌정사상 경험하지 못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해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언급하며 “국회가 입법 폭주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위험적 요소가 있는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오히려 헌법 수호자로서 이런 일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성과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 건전재정,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 굳건한 안보태세, 원전 생태계 복원, 노사법치주의 등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정상궤도로 올려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정책과 홍보는 국정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인 만큼, 직원들이 원보이스(한 목소리)로 최전선 홍보 전사가 돼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노력과 각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예진 기자 syj@

이재명 “정부 의료개혁, 전면 재검토 필요”

고려대 안암병원서 비공개 간담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방문해 의료대란 실태를 파악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의료대란대책특위)의원들과 함께 고려대 안암병원 의료진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엔 당대표 수행 실장인 김태선 의원과 의료대란대책특위 소속 위원장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이언주·김윤·강정희·박희승·백혜련·서미화 의원이 참석했다. 응급실·병동 등은 병원 보안상 방문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 내용과 관

련해 “상황은 매우 안 좋고 앞으로도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현장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개혁을 하려면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득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한데 (정부가) 그런 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경하게 밀어붙여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원의 규모 또는 기간 그리고 증원을 어떻게 분산 배치할 것인지, 증원 내용은 어떻게 채울 것인지, 지역 의료나 공공 의료, 필수 의료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 부분까지 연결시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도현 기자